

| 본위원회 스케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3차 본위원회 개최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 잇따른 불참으로
탄력근로 개선합의문(안) 등 6개 심의안건 처리 못해

이세종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7.(목)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웰컴룸에서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17명 중에 15명이 참석해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합의문(안)이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지난 2.19.(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술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제도의 첫 걸음을 뗀다는 평가를 받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전략을 담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새로운 의제별위원회의 발족도 준비 중이었다. 대표적인 시대적 과제인 격차 해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이 마련됐다.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문제를 다루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끝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노동계 위원 중 비정규직, 청년, 여성위원 모두가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이 '노동계 위원 4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의결할 수 있다'는 위원회 규정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의결 불능으로 만들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본위원회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보고회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3인 대표의 불참으로 의결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결국 이날 본위원회는 안건 의결은 하지 못한 채,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 직후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은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11. 3차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계 위원 3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 3인은 문성현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득에도 3.11. 오전 07:00에 예정되었던 3차 본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3인 대표는 위원회 대회의실이 아닌 참여연대를 찾아 그들의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차 본위원회 이후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정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터라 안타까움은 배가됐다. 본위원회 시작 6분전에 문자 메시지로 불참의 뜻을 나타낸 것도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기자브리핑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3인이 두 차례나 회의에 불참해 위원회의 의결을 막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많이 나왔고, 의사결정 구조를 고쳐서라도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3차 본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두 차례 본위원회 파행이후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했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3차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간사(한정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를 만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합의 정신을 반영한 입법 조치를 요청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 3차 본위원회에서 잇따라 의결하지 못한 6개 심의 안건에 대해 처리방향과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